

# 교육개방시대의 대학: UR의식과 UR형 대학

이 현 청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

## 1. 서 언

교육개방의 시대를 맞은 우리는 세계적 교육의 전이현상에 따라 교육내용 및 체제의 개방 그리고 교육구성원들의 이동을 예견하고 있다.

이 점에서 교육개방은 '교육적 동화'와 '문화적 접변'의 이중적 과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UR에 따라 선결되어야 할 교육개방의 과제도 많고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특히 UR에 대비한 대학구성원들의 의식과 관련된 과제와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과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교육개방이 단순한 '제도적 개방'이 아니라 의식과 관련되어 있으며 국제사회화와 유관되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현상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성과 함께 개방에 대비한 대학교육의 개혁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시장의 수요와 공급면에서 향후 10년을 추정해 볼

때 예견되는 고등교육인구의 변화라든지 고등교육에 투자되는 사교육비의 의존도 그리고 한국 고유의 교육문화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교육개방의 의미와 대비책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준비있는 개방을 강조하고 개방에 따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교육개방이 주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에 못지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이며 향후 고등교육 구성요인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대학의 다원화, 다양화, 다국화 그리고 국제화에 따른 변화에 대비하여야 하고 세계의 교육시장에 상대로 질적 경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한국 대학들은 교육산업(educational industry)적 시스템으로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면을 부인할 수 없고 '학생소비자시대'(student consumerized age)에 대비한 다양한 형태의 학사운영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 2. 교육개방의 영향과 대학교육

흔히 21세기는 교육의 세계화와 문화의 세계화 시대라고 주장되고 있으며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의 다원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제관계는 집단협력체제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에서 비록 우리의 대학교육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UR에 의한 교육개방은 시기가 중요한 뿐 교육발전의 측면에 기여하는 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구나 문화적 다변화에 의한 교육내용의 국제화적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개방 그 자체가 문제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개방의 기능은 '의식개방'의 기능과 같고 자녀를 타인과 공동으로 위탁관리하는 것과 비유될 정도로 민족과 국가 장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준비없는 개방은 경계되어야 한다.

교육개방의 기능은 역기능과 순기능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고 교육개방의 준비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 쌀개방과 농수산물 개방 등에 지나치게 민감해 있는 우리들의 정서로 본다면 어떠한 개방도 우려되지 않는 바는 아니겠으나, 쌀개방 자체보다는 개방했을 때 쌀의 소비를 할 것인가의 수용 여부는 교육의 소산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오히려 교육개방이 제일 큰 영향을 끼친다 볼 수 있다.

교육개방은 그 기능 면에서 다음 몇 가지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순기능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대개 ① 선진국의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시켜 줄 수 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권과 학습권을 신장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다. ② 교육을 개방함으로써 외국의 수준 높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방법 등의

도입과정에서 국내 교육기관들을 자극하여 질적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③ 외국 교육의 유입을 통해 기술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고 문화적으로도 다양성을 진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④ 교육시장의 개방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외국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한 것 못지 않게 우리의 교육을 외국에 진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⑤ 교육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외국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와 교육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교육개방의 순기능들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 못지 않게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다. 역기능으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① 교육이 의식과 관련되어 있고 단순한 지식과 기능의 전수과정이라기보다는 민족 구성원의 주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문화의 무분별한 침투에 따른 민족적 정체성과 주체성의 혼돈 내지 상실의 문제이다. ② 교육개방에 따른 무차별 자유경쟁체제는 교육의 질과 체제면에서 취약성을 탈피하지 못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잠식하고 자생력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다. ③ 일부 선도대학의 적극적인 개방에 따른 후발대학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나아가 교육계층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물론 사회계층에 따른 외국 대학 프로그램의 참여수준에 차이가 생겨 계층간 갈등과 위화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결국 교육개방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데 어떻게 교육개방을 슬기롭게 대처하느냐 여하에 따라 교육개방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특히 대학교육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문화와 함께 개방의 충격이 예상보다 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교육개방의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교육개방의 역기능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서 개방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기관 중에서도 어학계열이나 첨단과학분야처럼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분야는 모르나 사회과학이나 예체능 분야 등의 경우는 예측화된 교육이 될 우려가 있고 교육종속화(educational dependency)의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쇄국주의나 교육개방 그 자체를 봉쇄하는 일은 국가발전에 유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흔히 문화침략 국가와 문화적으로 침략당하는 국가 간의 차이는 주체성의 확립 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쟁위주의 학력주의 교육과 무국적 교육현상이 혼재하는 민족은 언제나 교육식민지적 현상을 탈피할 수 없었음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

### 3. 교육개방에 따른 대학교육 개혁

교육개방의 장·단점을 검토해 볼 때 명암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준비가 필요하며 교육개방화의 속도와 범위에 관한 기준과 '개방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개방화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실정이라 보기에 는 우리가 있다. 왜냐하면 국제경쟁력이 약하고 대학구성원들의 개방의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지도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개방에 따른 대학교육 개혁은 우선 대학체제와 대학체제면에서 대폭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첫째로 이제까지는 대학이 학력인플레이 현상으로 인해 높은 교육열이 지속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로 용이한 성장과 안일한 경영으로도 유지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경영에 있어서 국제경쟁적 경영체제로 돌입할 필요가 있다. 국제경쟁적 경영체제는 곧 대학경영의 효율화를 의미하며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 경영의 전문화와 행정권한 분산에 의한 효율화, 재정확보를 위한 자구화, 그리고 입학과 졸업의 자율화 등의 방법 등이 도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사회는 흔히 신민족국가사회로

전환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신민족국가사회는 대학의 역할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동질민족의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기존 대학의 사고체제에서 탈피하여 국제적 사고와 전문화된 사고로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로 대학의 선발과 분배의 기능에 대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에 선발과정과 분배의 역할을 유연성 있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의 정원 중심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계열별 대학별로 정원을 유연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 특히 편입학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평생교육체제의 확충을 통해 재수생과 재교육 대상자들을 대폭 수용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한마디로 대학의 학사운영체제는 대학생들을 소비자로 인식하는 소비자학사운영체제(client-centered management)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커리큘럼의 다양화와 교수방법의 개발이 요청된다. 커리큘럼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국제경쟁력 제고는 있을 수 없고 우수 외국 대학들의 다양한 커리큘럼과의 대결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의 고정된 커리큘럼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교수방법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커리큘럼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개방이 될 경우 통신매체에 의한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임을 감안하여 통신매체, 다중매체 방법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self-paced learning) 방법, 다중매체방법(multi-media package)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로 대학재정의 확보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대학재정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며 시설설비나 교육보조자료 그리고 인간자원의 측면에서는 단일대학 독단으로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대학풀제' 활용의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재정의 빈곤을 해소시키지 않고서는 개방이 가져올 충격은 배제할 길이 없다는 점을 깊

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별대학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역별 영역별 협력체제에 의한 자원 pool제, 교수 pool제, 실험실공동센터 등의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 체제를 통해 교육개방 대책을 강구할 수 있고 공동으로 제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다섯째로 대학구성원들이 개방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개방의식은 단순한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구성원 모두의 공동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교육개방을 무조건 배타적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방을 대비할 때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다. 개방은 하되 주체성 있는 개방을 하여야 하고, 개방을 준비하되 효율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UR에 의한 개방과 관련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교수들의 전공이기주의, 세속화된 전문주의, 그리고 무국적의 특성을 배제하지 못한 이론추구 등이며 교육개방은 단순한 학술 교류나 학위과정이지 아니라 국민의 사회화와 엘리트 집단의 '국제사회화'와 관련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로 대학체제의 개방화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대학은 교육개방을 전담할 부서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현재의 국제협력관계를 진단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장기대책은 교육개방시의 단일대학의 위상과 각국간의 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협력 유형 및 과정 등에 대한 종합적 관점이 제시 되어야 한다.

일곱째로 대학교육의 개혁 못지 않게 정부나 사회 차원에서의 UR 교육개방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우선 정부의 과제로는 산업구조를 조정함과 아울러 교육구조의 조정도 필요하다. 교육구조의 조정은 각 단계별 교육간의 수평적 통합과 시기별, 위계별 수직적 통합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개방에 대비한 정부규제의 완화와 동시에 그에 따라서 필요한 강화를 통해 제도정비를 할 필

요가 있다. 예컨대 강화의 측면은 공정거래제도 등을 들 수 있으며 UR 개방에 따른 협상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개혁을 위한 UR 대비 전문가 pool제를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교육개방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교육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대학별 교육산업 현황분석 및 개방관련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개방확대에 대비한 교육개방 관련 제도 정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교육개방은 대학만의 일이 아니므로 전 국가적인 관심과 사회 구성원들의 개방 의식, 국제화 의식 강구도 필요하다.

여덟째로 대학과제는 앞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적극적 기회창출을 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대학체제를 개방체제화 하여야 하고 교육과정(process of education)을 유연성 있게 하여야 하며 대학구성원의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껏 지속되어 온 국제 경쟁의 테두리를 탈피하여 국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배타적인 방법을 탈피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교육개방불제'로 전환하여 상호 격려하고 상호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야만 후발대학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고 영역별 연대나 지역별 개방연대가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소비자의 입장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도 개방 수혜자로서의 소비자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무조건적이고 맹신적 외국 선호와 비합리적 소비형태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 전체가 교육개방을 내실있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교육소비자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나 대학협의체 차원에서 개방에 따른 교육소비자 감시체제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소비자의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서구화된 교육'이 반드시 '근대화된 교육'이라는 관념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든 학생이든 'UR

형 학부모'와 'UR형 학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4. UR형 대학과 교육개방

대학교육은 한 민족과 국가의 사회·경제적 총체라 할 정도로 사회·역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점에서 대학은 곧 한 나라의 사회·경제·문화적 기업(socio-cultural enterprise)이라 할 수 있다. 교육개방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대학은 UR형 대학으로 정립시키는 과제가 필요하다. UR형 대학은 토착화된 학문의 주체성 위에 '교육자원의 세계화', '과정의 세계화', '제도의 세계화' 그리고 '교수의식의 세계화'를 전제로 하는 사회체제와 정책의 세계체제(global-oriented system)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의식의 경우는 탈지역화, 탈제도화, 탈종속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UR형 대학'은 무조건적인 개방의식이나 무조건적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UR형 대학은 어떠한 개방과 국제화에도 불구하고 그 근간에 있어서는 한국 대학의 특성을 견지하는 '한국형 대학'을 의미한다. 현명한 교육개방과 현명한 개혁, 그리고 한국적 '교육주권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대학교육을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개방시 교육주권의식과 교육개방의식이 적절히 조화될 때 바람직한 '제삼교육'이나 '신교육'이 가능해질 것이고 선별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UR형 대학을 전제로 하든 한국형 대학을 전제로 하든 간에 교육개방에 따른 대책과 과제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UR형 대학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있다.

첫째, 한국적 개방의식이 필요하다. 이는 학문과 교육의 한국화와 관련된다. 그리고 학문의 주체성 확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국적 개방의식이란

무대는 전 세계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결정에 있어서는 한국을 염두에 두는 교육적 사고가 필요하다.

둘째, 적극적 문화수용과 적극적인 교육기회의 확충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문화수용과 교육수용은 무조건적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 교육의 장점을 내부적으로 신장시키면서 세계교육시장을 상대로 교육산업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화된 교육'의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한국화된 장점을 오히려 역수출하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인식하는 일이다.

셋째, 교육개방에 따른 선별적 확산 전략이다. 이러한 선별적 확산전략은 교육교류를 상시화하면서도 그 내용과 절차, 범위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경계해야 할 일은 일부 대기업이 그러하듯 '교육덤핑' 현상을 초래한다거나 지나치게 상업화 경향을 띠거나 무분별한 외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일은 금물이다. 예컨대 특정 대학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외국 대학들과 협력하게 되면 모두 추종답습하려는 "교육 '나도' 주의"(educational me-too-ism) 현상이나 교육도미노현상은 경계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의 수평적 수직적 다양화가 필요하다. 수직적 다양화는 대학의 교육수준별로 다양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2년제 대학과 학부 그리고 대학원 등의 교육위계별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수평적 다양화도 필요하다. 수평적 다양화는 학과별 특성화와 권역별 지역별 특성화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학위제도와 과정의 다양화도 필요하다. 이러한 수직적 수평적 다양화는 우리대학들의 설립목적과 지역적 특성 그리고 규모면 등을 고려하여 제 위상을 찾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양화의 구현은 교육개방의 파고를 수렴할 수 있는 전제이기도 하다. 현재의 특정대학 추구형이나 모방형 대학으로는 한국형 대학의 특성을

발현시킬 수 없다. 교육개방의 전제는 다양화와 대학의 규모와 위치 그리고 기능, 설립 목적 등에 따른 역할 정립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통제와 더불어 문화자율성(cultural autonomy)을 확립하는 작업이다. 교육개방은 교육기관이나 교육수혜자 그리고 교육 그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교육개방형태는 교육미디어에 의존할 경향이 높기 때문에 문화적 전파기능이 뛰어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통제가 병행되어야만 교육개방의 역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물론 교육자율성과 문화자율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국민의 학습권과 문화권을 신장시키되 '한국인다운 대학인', '한국인다운 교수', '한국인다운 커리큘럼'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매스미디어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대학만의 UR 대비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섯째, UR형 대학은 체제와 체계면에서 한국적 특성과 다양화 그리고 개방적인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교육개방에 따라 외국의 고등교육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이 소개될 때 그 특성은 학생소비자의 기호와 교육적 욕구에 부합하는 소비자 중심 형태가 될 것이 예상된다. 한 마디로 교육받는 장소, 교육받는 시간, 교육내용, 졸업 입학 조건 그리고 교재와 교육방법 등에 있어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지녀야 하며 획일성, 경직성, 폐쇄성 등을 탈피하는 제도와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과 대학의 위상, 교육대상 그리고 설립목표 등에 따라 다양화된 교육과정과 효율적인 방법이 바람직하다. UR에 따른 다국간의 교육협력은 단순한 교수나 학생 교류 그리고 한정된 프로그램의 상호교류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다국화된 캠퍼스, 다문화적 교육과정, 다국화된 교수들의 제도적 특성이 두드러질 것이다.

이 점에서 외국인 교수들의 영입에 관한 사항, 외국인 학생들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강의시의 언어

에 대한 사항, 외국인 학생과 교수를 관장할 부서, 예컨대 국제교육부(international education division)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 교수나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습득케 하는 한국어 센터(KLSL: Korean language as a second language) 같은 기구도 구상해야 한다. 이외에도 외국인 기숙사와 외국인 대상 커리큘럼, 그리고 외국인 대상 강의 스케줄 등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많은 내용들이 있다. UR형 대학은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개방이후 대학'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체제와 체계면에서 한국적이면서도 다양화와 개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UR형 대학은 적극적인 개방관을 지녀야 한다. 모든 대학 구성원들은 체제와 체계의 개방 못지 않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의식과 개방관을 지녀야 한다. 외국의 분교와 프로그램이 들어오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외국에 우리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거나 영역별로 프로그램을 이식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예컨대 이공계 분야의 한국 대학 협력센터를 미국에 설립할 경우, 규모와 학과 특성 그리고 질적 측면에서 유사한 우리나라의 몇 개 대학이 공동출연하여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UR형 대학은 자국화교육과 세계화교육의 조화를 의미한다는 것도 이러한 양면적 특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여덟째, UR형 대학은 커리큘럼의 내국화와 외국화의 과제가 있다. 커리큘럼의 외국화는 다문화교육, 다언어교육 그리고 외국인 대상교육 등과 관련된 반면 내국화의 경우는 학문의 주체성과 한국화교육과 관련된다. 따라서 커리큘럼의 이원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커리큘럼의 수준과 내용 그리고 영역에 따른 수평적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커리큘럼 설정시에도 다언어와 다문화적 특성을 내포해야 하고 외국인과 내국인 그리고 내외국인을 다 포함하는 형태 등으로 구분 설정되어야 한다.

아홉째, UR형 대학은 우수교수와 우수학생을 유치하려는 '고객유치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앞서도 논의한 바대로 대학인구의 감소와 함께 우수한 교수의 확보 여부가 앞으로의 대학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체제와 체계의 개편 못지 않게 홍보전략을 세워야 하며 세계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통한 학생유치와 연구비 유치 그리고 우수교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점에서 대학 '홍보처'나 대외협력부서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열째, 교육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화(centralized)와 분권화(decentralized)가 동시에 필요하다. 교육개방의 파고는 단일대학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거센 파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중앙집권화적 체제와 단일대학에 위임하는 분권화된 내용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에게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외국 대학들과의 협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열한째, 교육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의 지도력, 계획수립능력, 커리큘럼의 국제화, 캠퍼스의 국제형으로의 전환 등을 고려해야 한다.

## 5. 결 론

교육은 문화적 외교(cultural diplomacy)이다. 따라서 교육개방의 파급효과는 문화적으로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것이 예견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내부적으로는 근시안적 임시 경쟁과 일류자만성향 그리고 특정대학 모방성향, 전공이기주의 성향, 교수분파 성향 등의 의식적 고착화 현상이 내재되어 있다. 체제 구조면에서도 획일성, 경직성, 비자율성, 배타성 등의 특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재정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취약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인구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동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럴 때 우리는 세계적 교육산업시대를 맞고 있고 교육무한경쟁시대와 교육소비자시대를 맞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깨어나는 대학, 임보다는 귀와 눈이 트이는 대학이 필요한 시대이다. 교육개방은 대등한 '나'와 '너'가 만나 '우리'를 형성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